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지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83
----------	------

발의연월일 : 2018. 9. 21.

발 의 자 : 김지만 의원

장상수 의원

김혜정 의원

이만규 의원

임태상 의원

이영애 의원

하병문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대구광역시의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조례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 현금지출을 하는 등 집행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여,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집행을 막고자 함(안 제5조)

마. 매월 1회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을 막고자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29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4.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전문개정 2010.4.21]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4.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2-2100-3423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